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의안번호	177
------	-----

발의일자 : 2005. 8. 4

발 의 자 : 최광렬의원외15인

1. 主 文

별첨 “결의문(안)”과 같음

2. 提案理由

- 최근에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중앙정치권에 예측되는 부작용과 공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이유로 전국의 기초단체장들과 시민단체, 학계, 언론등이 기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권에서는 이를 묵살하고서 더 나아가 기초의원 후보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최근에 개정하였음.
- 이는 중앙정치권에 줄서기 등 공천과정에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간과한 처사로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아니고 정당을 위한 정당정치로 변질되어 지역별로 특정정당의 독식이 심화됨으로서 플뿌리 민주주의를 제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더욱이 기초의원 정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은 주민 대표성의 혼선과 책임성 약화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도 약화되는 등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지역현실과 민의를 저버린 개악이라고 규정하여 38만 사하구민과 사하구의회는 관련 개정 법률을 반드시 폐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임.

3. 보낼 곳

- 청와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案)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감축, 중선거구제 실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 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부산 사하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釜山廣域市 沙下區議會 議員一同